

# ‘농지 투기 행위’ 근절 실현

### 민주 이원택 의원,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에 식량 공급, 국토환경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 이익의 예상 농지를 구입,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제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은덕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 “서울의 새역사 쓰도록 기회 달라”

### 민주 김은덕 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 호소 전주갑 광역 기초의원단과 함께 광진구서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은덕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과 4월 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은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광근, 이병도, 진형석 전북도위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전주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은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지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은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 “보도된 투기의혹 사실과 달라, 억울해”

### 박용근 도의원 “불필요 부동산 조만간 정리 예정”

박용근 전북도 의원(장수)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투기의혹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장수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업무에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부응하지 못한점은 군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경우는 2010년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2억 9천만원에 구입했지만, 현재 전세가는 2억4천만원이고, 최근 매물로 나온 시세는 2억 2천만원이라며 전혀 꺾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 도청 앞 오피스텔과 주택 3채를 소유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분양을 책임졌던 후배가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구입을 부탁해 구입했을 뿐”이고, “장수군에 소재한 주택 3채는 돌아가신 형님의 자녀가 없어 물려받은 집이다. 현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다”고 설명했다.

박용근 의원은 덧붙여 “투기라고 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을 3~4년 보유하다 이득을 보고 매매 해야 하지만, 취득 후 한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어 투기로 매도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향후 더이상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은 조만간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발언하는 정외용 외교부 장관 정외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내 유명기업 익산 유치 ‘사활’

### 민주 김수홍 의원, 충북 위치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이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한번 충청북도를 방문해 투자유치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으며, 충북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과 LG에너지솔루션을 찾아 익산 투자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30일 오전 김수홍 의원은 먼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중 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투자가 활발한 충청권의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내 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지사와 전북도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으며, 충북과 전북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이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의원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로부터 투자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다.



지리적 이점 이외에도, 청주시민의 기업유치 노하우를 중심으로 익산시에 필요한 전략들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익산이 호남권 교통의 요지임에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은 기업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부재한 탓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바로 뛰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을 방문해

서정수 대표를 만났다.

지난 2015년 청주로 본사를 이전한 셀트리온제약은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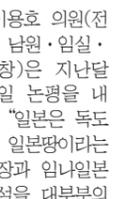
서정수 대표는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인재 채용이 힘들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김수홍 의원은 젊은 인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 및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찾은 김 의원은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 시 익산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홍 의원은 “두 번에 걸친 충북 방문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시야와 안목을 한 층더 키울 수 있었다”며 “단순히 기업유치, 고용증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익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中·日, 이렇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우길 판”

### 이용호 의원 “3일에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곧 있을 G7 정상회의서 적절한 조치 요구해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일·일본 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

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그런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저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중의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4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었고, 문 대통령이 곧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외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민족의 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힘을 합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